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준과 장거리 로켓 발사의 전략적 의도

배 정 호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북한은 2009년 2월에 접어들어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주장하며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동년 4월 5일 11시 30분 15초에 장거리 로켓의 발사를 감행하였다. 비록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위성궤도 진입에는 실패하였지만, 사거리는 3,200km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를 이루어 핵능력과 미사일능력을 결합하게 될 경우, 동북아 전략환경은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고, 한국의 대북정책 및 안보정책 그리고 통일환경도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의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여부 등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의 문제점 등에 관해 살펴본다.

1.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준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준을 살펴보면, 북한은 1984년에 사거리 340km인 스커드 B를 개발한 후, 1991년에 한반도 전체를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 550km 미사일 체계를 완성하였고, 1993년에 일본 전역을 거의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 1300Km 노동미사일을 개발하였으며, 중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1, 2호를 개발하고 있다. 대포동 2호는 미국 본토까지 닿는게 목표이다.

실전전략의 차원에서 2006년 7월의 스커드 및 노동 미사일의 실험발사를 분석하면, 핀 포인트(pin point)가 가능한 정밀 명중도의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1) 새벽이 되기전 발사, (2) 발사대가 붙은 차량(TEL)에서 발사, (3) 사거리가 다른 미사일을 일정한 범위내의 착탄 등이 주목된다.

즉, 북한의 스커드 및 노동 미사일은 새벽이 되기 전에 어둠속에서 차량의 발사대에서 발사할 수 있으므로, 발사 위치 및 타이밍을 사전에 포착하기가 쉽지 않으며, 게다가 상당수준의 정확도까지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수준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장거리 로켓이 위성궤도 진입에는 실패하였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약 25년만에 사거리가 340km -> 3,200km로 10배정도 진보한 것이다.

2. 북한의 장거리 발사의 전략적 의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의 전략적 의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장거리 로켓의 발사는 유도기술, 정밀기술, 추진엔진 등의 부분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기능과 거의 일치한다. 북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기술 능력을 과시할 수 있다. 특히, 핵탄두 소형화를 완료하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보유국'이 된다. 경제전략적 차원에서 보면, 북한은 향상된 미사일 기술을 수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2008년 11월 이란 부통령이 방북하여 군수사업책임자, 미사일 연구소 소장, 99호실 관계자, 39호실 관계자들을 만난 사실이 주목된다.

둘째, 대외전략적 차원에서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추구하며 관계개선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파악할 수 있다. 북한은 1998년 8월 31일 미사일 실험발사 후, 미국과 제네바 합의에 들어갔고, 2006년 7월 5일 미사일 실험발사의 실패후에는 동년 10월 핵실험을 단행하여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며 2007년 6자회담에서 2·13합의를 도출해 내었다. 북한이 2009년 3월 25일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통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회부에 반발하여 6자회담을 파탄 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와의 담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즉,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 능력을 '교섭능력(bargaining power)'으로 활용하여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체제보장, 경제적 지원 등을 교섭하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미·북 양자회담이 성사되면, 북한은 한국을 배제하는 소위 '통미봉남' 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셋째, 내부 정치적 차원에서 내부결속을 위한 것이다. 북한은 김정일 3기 체제의 출범을 위해 권력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내부결속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대남 안보전략차원에서 보면, 미국 및 미·일동맹의 한국 지원 능력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노동미사일의 정밀 명중도를 주일 미군기지에 '핀 포인트(pin point)' 공격이 가능한 수준까지 향상시키거나, 미국 본토의 대도시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갖추게 되면, 북한은 유사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즉, 주일 미군기지가 북한에 의해 정밀 타격을 받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거나, 미국이 북한의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공격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미국은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한 개입은 미국 국내 여론, 의회의 논의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무력화될 수도 있다. 한국의 안보는 미국 핵우산 등 안보 지원능력의 취약화로 인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의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3.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의 문제점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와 관련, 미국 국방부는 2009년 3월 11일,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3.11)을 통하여 북한의 우주발사는 기본적으로 미사일과 인공위성 양쪽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언급하였다. 또, 마이크 멀런 합참의장은 동년 3월 28일 CNN 방송과의 대담에서 “위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위협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유도기술, 정밀기술, 추진 엔진 등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기능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므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2006년 10월 15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5항 '탄도미사일 개발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북한을 제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일반 국제법 원칙에 따라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자유'라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국제사법재



판소에 의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가 일반 국제법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2009년 4월 5일(현지시간)에 개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국 전체이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신중한 입장을 취함에 따라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일본·영국 등 10개국이 대북 제재를 주장하고 있고, 중국·러시아 등 5개국이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1718호의 적용만 강화해도 북한 요인의 여행 규제, 대량살상무기와 연관되는 불법 송금 등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적지 않은 압박이 될 수 있다고 한다.

